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ELS 논란 강원문화재단 현장 점검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의장단-강원문화재단 간담회	1
연암뉴스		강원도의회, 도 산하기관 순회 방문...현장 의정활동 강화	2
쿠키뉴스	온라인	강원도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도 산하기관 순회방문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 12일까지 조례 심의	4
강원도민일보	10면	시 천사지킴이 연합회장 이·취임식	4
KBS 춘천	온라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불투명	5
江原日報	21면	[동정]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비례)	6
江原日報	01면	[광고]	6
강원도민일보	01면	[광고]	6
江原日報	05면	전공의 업무 떠안은 의료진 피로감 한계	7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대 의대 내년도 정원 '91명 증원' 140명 신청	7
江原日報	04면	"늘봄학교 차질 없다" vs "졸속 추진 중단하라"	8
江原日報	16면	화천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 첫날 호평	9
江原日報	21면	지적발달장애 학생 20명, 대학 입학 꿈 이뤘어요	9
강원도민일보	16면	양양군 출산에서 돌봄까지 원스톱 지원	10
江原日報	14면	삼척 동계전지훈련 3만명 유치 성과	10
강원도민일보	07면	강원 소기업·소상공 못 값은 빛 '1000억원대'	11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12조5000억원 규모 7개 철도 국가사업 관철 총력	11
강원도민일보	02면	'광역대표 도서관' 강원만 없다	12
江原日報	02면	새 사업자 선정 또 실패 ... 위기의 망상지구	12
강원도민일보	01면	'기업도시 시즌2' 기업혁신파크 춘천유치 내주 결정	13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근화동 일대 개발사업 속도낸다	13
강원도민일보	14면	정선군 초중등 '꿈키움·창의' 아카데미 운영	14
江原日報	10면	춘천시 교육발전특구 전담조직 만든다	14
강원도민일보	12면	태백시 '외국인 유학생 모셔라' 유치 본격화	14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아파트 미분양 4개월 연속 감소	15

江原日報	13면	공동 보육시설 갖춘 임대주택 구축	15
江原日報	07면	올해 강원도 전기차 보조금 '978만원'	16
江原日報	12면	솔올미술관 개관 한달도 안돼 부실시공 논란	16
江原日報	11면	원주서 夜놀자 야간관광 확충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공공의료 위기 외면 안돼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영월~삼척 고속도로, 올 상반기 예타 통과돼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꼬이는 ‘의·정 갈등’, 이제는 국민이 쫓겨해야 하나	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순회방문 간담회 개최

2024. 3. 4.(월), 11:00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4일 강원문화재단을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14개소에 대한 순회 방문에 나섰다.

ELS 논란 강원문화재단 현장 점검

도의회 의장단 현안과악 나서
도 산하기관 14개소 순회방문

속보=강원문화재단이 ELS(주가 연계증권)에 혈세로 조성된 자금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이상

을 잃게 생겨 파장이 확산(본보 26·27·28일자 2면 보도)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김종욱 사무처장 등은 4일 강원문화재단을 찾아 현안 파악에 나섰다. 앞서 재단은 기본재산 217억원 중 50억원을 ELS에 투자했고 이중 10억원에 가입한 상품은 올 1월 만기가 도래, 수익률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다. 40억원 규모의 ELS는 4월과 5월, 6월, 7월 차례로 만료되며 50%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도 보완이 없으면 제2의 ELS 혈세 손실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자 도의회는 이날 기본재산 투자 손실을 위한 규정 정비 등 대책 마련을 고민했다. 이날 방문에는 권 의장과 함께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 김희철·양숙희·임미선 도의원 등이 동참했다.

의장단은 이어 강원관광재단,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차례로 찾았다. 8일에는 강원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 스크립스코리아형체연구원, 11일에는 강원산용보증재단, 강

원테크노파크, 강원연구원, 14일에는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도 산하기관 14개소 순회 방문한다.

권혁열 의장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과 공사 등이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문”이라며 “출자·출연 기관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의회는 5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326회 임시회를 개최, 8일간 일정을 이어간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종합 03면



도의회 의장단-강원문화재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등 의장단과 춘천지역 도의원들이 4일 강원문화재단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서영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강원도의회, 도 산하기관 순회 방문...현장 의정 활동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강원문화재단을 시작으로 강원도 산하기관 14곳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의장단이 출자·출연기관 등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일방적인 업무보고와 불필요한 격식은 걷어내고,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권혁열 의장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올해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현안 해결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2024년 03월 04일 (월)

쿠키뉴스

지역

강원도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도 산하기관 순회방문

하중천



4일 강원도의회 의장단이 강원문화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4일 강원문화재단을 시작으로 도 산하기관 14개소를 순회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 의장단이 출자·출연기관 등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방적 업무보고와 불필요한 격식을 배제하고 방문 기관의 현황과 기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일정은 4일 강원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8일 강원개발공사,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11일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연구원, 14일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이다.

권 의장은 “이번 산하기관 현장방문은 도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누리일보, 명성일보 등 84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종합 03면

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12일까지 조례 심의

도유림 경영·관리 조례 등 상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 조례 등을 의결한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8일간 326회 임시회를 연다. 3월 회기에는 도유림 보호협약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 조례'(홍성기), 도 본청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한국

수화언어활성화지원 조례 개정안'(심오섭), 강원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조례'(심오섭),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최재석) 등이 상정된다.

또, '강원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김용래), '강원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조성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0면



시천사지킴이 연합회장 이·취임식 원주시 천사지킴이연합회장 이·취임식이 4일 원주축협 회의실에서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이재웅 시의장, 박만호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장,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상혁 회장이 취임하고 김길선 회장이 이임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불투명



[앵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이 10년이 다 되도록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터미널 건물 소유권마저 민간업체로 넘어갔는데, 정상화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2000년부터 러시아와 중국 등 북방항로를 운항했지만 운영사 경영난 등으로 2014년 6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장기간 방치되다 결국,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했지만, 제때 응찰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한 민간업체에 낙찰됐습니다.

[강정호/강원도의원 : "소유권을 강원도가 취득하게끔 도의회에서 예산까지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개인업체에게 민간업체에게 낙찰이 됐거든요. 민간업체와 협의해서 하루 속히..."]

민간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간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터미널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선사 유치 등 이렇다 할 사업 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항만부지가 활용되지 않으면서, 강원도는 해당 업체 측에 항만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업체 측과 협상을 통해 터미널 매입을 추진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태/강원도 해운팀장 :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그 국제여객터미널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속초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업체 측이 강원도에 협상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순조로운 협상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터미널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조연주 yeonjoo@kb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인물동정 21면

◇임미선강원특별자치도의

원(비례)은 5일

오전 11시 춘천

퇴계농공단지

에서 열리는 동양

아이텍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



2024년 03월 05일 (화)

광고 01면

江原日報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청경, 도민과의 약속

청결한 강원
도의회가 앞장섭니다

▲ 20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도의회 개최(3.8.)

제326회 임시회

3. 5. ~ 3. 12.(8일간)

- 청소년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현지시찰 등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광고 01면

청경, 도민과의 약속

청결한 강원
도의회가 앞장섭니다

20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도의회 개최(3.8.)

제326회 임시회 3. 5. ~ 3. 12.(8일간)

□ 청소년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현지시찰 등

2024년 03월 05일 (화)

사회 05면

江原日報

전공의 업무 떠안은 의료진 피로감 한계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처벌 절차를 개시했음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 현장에서는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병원마다 시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궁여지책을 짜내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대학들은 4일까지 마감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을 놓고 밤늦게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었다.

■전문의 피로감 호소=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종합병원의 수술이 평소의 약 7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피로감을 호소, 의료대란 시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진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A전문의는 “전공의들이 해야 하는 일을 전문의들이 나누어 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문의 B씨도 “전문의들이 매일 번갈아가며 당직을 서고

도내 종합병원 수술 진행 평소 대비 70% 수준 떨어져 대학들 의대 증원 규모 고심 강원대 ‘49명→140명’ 신청

있으나 전문의 인력도 충분치 않다”고 호소했다. 일부 병원은 교수들이 번갈아 응급실 당직을 서는 등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데다 일부 전임의들의 재계약 시기도 겹쳐 있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는 강원지역 내 대학병원이 외래진료를 축소할 경우에 대비해 지방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및 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강원대 ‘91명’ 증원 신청=교육부가 각 대학에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하면서 의과대학과 대학본부도

고심을 거듭했다. 강원대의 경우 현재 49명인 정원을 140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합의, 이날 교육부에 신청안을 제출했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의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요구대로 무작정 정원을 증원하기에는 시설투자 등 예산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더욱이 학생들이 졸업한 후를 생각하면 의사협회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서화·강동휘기자

강원도민일보

강원대 의대 내년도 정원 ‘91명 증원’ 140명 신청

지역 필수의료·삼척분원 고려 제출
의대 측 반대, 학내 갈등 불가피

가톨릭관동대·한림대 등 내부 고심

강원대가 기존보다 91명 많은 140명 규모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학내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대는 이날 장고 끝에 의대 정원을 기존 49명에서

140명으로 91명 증원하는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현영 강원대 총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에 100명으로 신청했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4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최대치의 근거가 있고, 강원지역 필수의료체계,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등을 생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반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강원대는 신청에 앞서 같은 날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했으나 의대 측에서는 정원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의대·의전원 학생들 역시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강원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은 4일 저녁까지도 정원 증원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이어갔다. 의대 정원 증원은 대학 내부에서 복잡한 사안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이 보장된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학 입장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그러나 반발이 거센 의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각 대학의 고심은 마감 제출 기한인 4일 자정

까지 이어졌다. 연세대 원주의대의 경우 정원 확대 입장을 밝힌 본교와는 별도로 증원 신청 여부를 논의했고, 가톨릭관동대도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한림대 역시 지난해 제출했던 30여명 증원 신청을 두고 추진 가능성을 조율했다.

강원도내 한 대학의 주요 관계자는

“관건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느냐”라며 “각 대학의 의대가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 이 부분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주요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임의로 의대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민영 ▶관련사진 4면

2024년 03월 05일 (화)

종합 01면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사회 04면

“늘봄학교 차질 없다” vs “졸속 추진 중단하라”

속보=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4일 학교현장 늘봄 프로그램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지만 도내 교직원단체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4일 오후 신경호 교육감은 춘천 석사초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늘봄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늘봄 개설 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 배치 계획 등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초교 1학년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해주기도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4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늘봄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도내 4개 학교에서도 채용을 마무리하고 있어 이번 주 중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추진에 대한 반발(본보 2월27일자 4면 보도)을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조 강원지부는 이날 석사초교를 방문한 신경호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늘봄학교 중단을 촉구했다.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인력 미채용, 늘봄 공간 부족 등 졸속

신 교육감 현장 찾아 준비태세 점검 ... 이번 주 중 전면 시행 예정 전교조 강원지부 “인력 미채용·공간 부족 등 학교에 책임 전가”

추진으로 학교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방과 후 이뤄지는 돌봄서비스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락윤 학비노조 강원지부 조직국

장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며 “도교육청은 올 7월부터 각 학교에서 근무할 늘봄 실무인력 수백명을 새로 채용하는데 이는 혈세 낭비”며 “기존 돌봄전담사, 방과후전

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늘봄전담사로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늘봄학교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며 “이번 주 중 차질 없이 출발하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4일 춘천 석사초교 앞에서 늘봄학교 추진 점검차 방문한 신경호 교육감을 만나 “늘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기존 교사들이 늘봄 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2024년 03월 05일 (화)

江原日報

지역 16면

화천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 첫날 호평

초등학교 1~2학년 80명 입학
영어·체육 등 프로그램 다양
사교육비 절감 등 효과 거둬

【화천】“마음은 화천에 있지만
세계로 나가는 큰 꿈을 가질 거
예요.”

전국 첫 지자체 주도 돌봄교
실이 시작된 4일 화천커뮤니티
센터를 찾은 어린이들은 ‘마음
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라는
표지석을 보며 ‘꿈’, ‘세계’라는
글자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초등 1, 2학년 어린이
80명은 이날 학교 입학식을 마
친 뒤 돌봄교실을 찾아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하
는 돌봄교실 첫날을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표현영어를 비
롯해 아동체육, 독서+스피치,



◇화천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배정된 돌봄교실을
찾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천=장기영기자

싱어롱, 창의 미술, 난타, 드럼
등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즐기면서 오후 7시까지 돌
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 유소라씨는 “아
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시켜야 할
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젠 큰 짐
을 덜었다”며 좋아했다.

지난달 27일 개관한 커뮤니

티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자치
단체가 주도하는 돌봄시설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온종일
돌봄, 초·중·고교생을 위한 학
습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최문순 군수는 “교육지원과
돌봄에다 주거지원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인물 21면

지적발달장애 학생 20명, 대학 입학 꿈 이뤘어요

강릉영동대 휴먼레저음악과 첫 개설 입학식

대학 측 장학금 제공·공연단 설립 추진 방안 모색

강릉영동대가 대학 생활을
고대했던 강릉지역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꿈을 실현시켜
화제다.

강릉영동대는 지적발달장
애인 학생을 위한 휴먼레저
음악과를 올해 처음 개설하
고, 4일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학과에 입학한 지적
발달장애인 20명의 나이는
20세부터 48세까지 다양하
다. 입학생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고 싶었
으나, 수능능력시험을 치르
기에는 어려움이 커 꿈을 이

룰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강
릉시지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와 강릉영동대
측이 머리를 맞대면서 공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릉영동대는 올해 성인
학과로 이 학과를 신설하고,
입학한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학하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드럼과 색소폰 연
주, 난타 등 음악에 소질을 보
이고 있다.

입학한 장애인들은 개강
첫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강릉영동대 휴먼레저음악과에 입학한 지적발달장애인 학생들.

쉬는 시간 어울려 사진을 찍
는 등 의욕적인 캠퍼스 활동
을 시작했다.

대학은 스포츠 레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수업에 포함할 방침이다. 장
애인 공연단을 추진하는 방

안도 모색하고 있다.

전명희 강릉시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은 “지적발
달장애인들의 꿈이었던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준 학교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장애학생 학부모는 “아

들이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말해도 그동안 여러가지 어
려운 점이 있어 보낼 수 없었
는데, 이번 대학 입학을 계기
로 새로운 뜻을 펼칠길 희망
한다”고 했다.

최영재기자 yj5000@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6면

양양군 출산에서 돌봄까지 원스톱 지원

육아통합지원센터 본격 가동
맞벌이 양육부담 완화 기대
산후조리원·도서관 등 입주

양양군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군 육아통합지원센터는 4일 학부모와 원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 하나어린이집 173명, 현남 하나어린이집 14명 등 총 187명의 원생 입학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김진하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공공보육강화 차원에서 추진되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는 4일 양양 하나어린이집 173명, 현남 하나어린이집 14명 등 총 187명의 원생 입학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 공공산후조리원 등이 한 곳에 들어서 출산에서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양양읍 서문리에 건립된 육아지원센터는 3000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2324㎡ 규모로, 이날부터 하나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다 이어 이달 말 공공산후조리

원, 작은도서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건축물 준공에 이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6~12세 아동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맞벌이 가구 자녀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어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이순애 육아지원센터 소장은 "4일 양양 하나어린이집 16개 교실, 현남 하나어린이집 4개 교실이 개원해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며 경제활동도 할 수 여건이 마련됐다"며 "산후조리부터 육아와 방과 후 돌봄까지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훈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4면

삼척 동계전지훈련 3만명 유치 성과

22억원대 경제효과 올 5개 종목 79개팀 방문
“체력인증센터 첨단장비·체육공원 시설물 우수”

【삼척】올겨울 삼척을 찾아 전지훈련에 참가한 운동선수는 연인원 2만9,902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척시가 동계 훈련단 참가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개 종목, 79개 팀이 삼척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가졌다. 이는 영동지역의 온난한 기후와 삼척체력인증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삼척복합체육공원 내 운동 시설물의 우수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시민단체 및 유관단체의 협력이 선수단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한 점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척체력인증센터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체력측정 서비스를 전지훈련단에 제공해 왔고, 올해 신축된 복합스포츠센터로 이전해 더 나은 환경과 시설을 선보이고 있어 전지훈련단 유치에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에 앞서 2019년도부터 삼척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한 외지 선수단은 360개 팀, 연인원 9만9,9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군 시 체육지원팀장은 “앞으로도 삼척지역이 기후와 시설면에서 전지훈련 최적지임을 홍보해 스포츠 메카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만진기자 hjm@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경제 07면

강원 소기업·소상공 못 갚은 빚 '1000억원대'

사고비율 4.2% 근 5년 최고치

신보 대위변제액 1년새 3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

코로나 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경기 불황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가중됐다.

4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대위변제액은 548억1800만원으로 전년(177억2500만원) 대비 370억9300만원(209.3%),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69억5700만원)과 비

교하면 378억6100만원(223.3%) 증가한 수준이다.

대위변제 비율은 2019년 1.33%에서 2020년 0.85%, 2021년 0.83%, 2022년 0.67%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2.72%로 2%대를 넘어섰다. 대위변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강원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도 1084억3500만원으로 전년(382억3700만원) 대비 701억9800만원(183.6%), 2019년(264억8900만원)보다 819억4600만원(309.4%) 대폭 증가했다. 사고비율도 4.16%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부

터 2022년까지 강원지역 사고 비율은 1.4%를 넘지 않았기에, 한계상황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강원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의 평균 사고율은 5.27%, 대위변제율은 3.87%로 강원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증가했다. 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노란우산 폐

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3728건으로 전년(2903건) 대비 825건(28.41%), 2019년(1729건) 보다는 115.61%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도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액수는 389억원을 기록, 전년(257억원) 대비 51.4% 늘어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강원에는 이어서는 전남(45.1%), 제주(43.5%) 등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강원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130억, 2020년 162억, 2021년 217억, 2022년 2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크게 늘었다.

정우진·황선우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종합 02면

강원 12조5000억원 규모 7개 철도 국가사업 관철 총력

도, 신규 일반노선 국토부 건의
원주~춘천~철원 순환 철도망 등
수도권 강원시대 경제도약 발판

강원특별자치도가 12조 5000억원 규모 철도 사업의 국가 철도망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에 속도를 낸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도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신규 일반철도 7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되는 철도사업이 담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달엔 전국 시·도로부터 5차 국가 철도망에 담을 일반 철도사업을 제출받은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광역 철도 사업을 건의받는다. 최종 수립은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망됐다.

강원도는 총 7개 신규 일반철도 노선을 제출했다. 각 노선은 도내 철도망 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일반철도 건의사업



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구간이다.

철원군과 원주시, 춘천시를 관통하는 원주~춘천~철원(127.7km) 철도는 영서와 영동을 잇는 '격자형 순환 철도망'을 완성하게 된다. 충청도와 전라도 등 남부 권역과 직결돼 한반도 중앙을 종단하는 내륙물류 축으로도 기능할 전망이다.

제천~평창(57.8km) 철도는 중부내륙과 강원도를 이어 기존 100km에 달하는 이 구간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한다. 제천~삼척(124.6km) 고속화 사업은 강원 남부지역과 도내 고속교통망을 30분 내 연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연천~철원 전철화(29.3km)는 강원

북부 지역의 관광수요를 늘리고 평창 사북 철도(56.4km) 고속화 사업은 청량리와 정선 구간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등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성연결선(1.7km)과 춘천~속초(93.7km) 철도는 동해안 항만과 연계한 미래 화물 물동량 확보와 관련됐다.

김진태 지사는 "7개 노선은 우선순위가 없이 모두 중요한 노선"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광역지자체 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통팔달 순환 철도망을 구축해 강원 경제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오는 5월 광역 철도사업인 GTX-B 노선 춘천연장과 D 노선 원주신설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GTX 사업은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만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GTX-B 노선의 춘천연장에 대한 총사업비는 최대 42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반영시엔 최대 7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광역대표 도서관’ 강원만 없다

춘천시립도서관 역할 수행 한계

오늘 강원연구원 관련 주제 포럼

정부가 광역 시·도 맞춤형 도서관 정책 수립에 돌입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에만 ‘광역대표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격차가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도서관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별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

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지역별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여서 역할이 크다. 그러나 강원은 도 단위에서 건립한 광역도서관이 전무하다. 대신 춘천시립도서관이 2018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의 시·도는 강원과 충북 2곳뿐인데 충북은 2028년까지 청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도차원 광역대표도서관이 없는 곳은 강원 유일해진다. 춘천시립도서관은 올해 광역대

2024년 03월 05일 (화)

종합 02면

표도서관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과 작은도서관 책박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 소속 기관인 만큼 강원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총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연구원은 5일 ‘강원도 대표도서관이 없다’를 주제로 제4회 분권과 지역개발포럼을 연다. 김진형

江原日報

새 사업자 선정 또 실패 ... 위기의 망상지구

2024년 03월 05일 (화)

종합 02면

강원경자청 공모 마감... 사업제안서 제출 기업 0곳

투자 유력 대기업 관련 의혹·투머에 부담 느낀 듯

속보=인천 전세사기범 연루 등으로 12년간 표류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본보 1월11일자 14면 보도)가 또다시 새 사업자 찾기에 실패했다.

국내 굴지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유력했지만 지역사회가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며 해당 기업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가 마감됐다. 당초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사업제안서를 낸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망상1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343만6,125㎡(104만평)에 6,674억 원을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 외

국교육기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최대 프로젝트다. 2018년 동해이씨티가 사업 시행사로 선정됐지만 인천 전세사기범 일명 ‘건축왕’ 남모(63)씨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재계 20위권의 대기업이 강원경자청에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이 기업은 사업 부지를 일부 확보하며 투자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일부 단체가 지난해부터 경자청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

자청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자청 역시 이 단체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투자를 검토해 온 대기업 측은 사업 시작도 전에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된 데다 이번 사태에 지역 내 여러 이익 집단이 관여하고 있다는 투머까지 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사업 기간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돼 있어 올 연말 12년간의 사업 기간이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도지사 권한으로 1년 단위 연

장이 가능하지만 사업 시행자 자체가 없을 경우 지정 취소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경자청은 조만간 재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망상1지구의 연내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강원경자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숨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당한 투자 유치 업무를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전명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종합 01면

'기업도시 시즌2' 기업혁신파크 춘천유치 내주 결정

춘천시-더존비즈온 공모 도전
남산면 광관리 368만㎡ 조성
국토교통부 내주 중 결과 발표
춘천 코앞 최종 선정 관심 집중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의 춘천 유치 공모 결과가 이르면 내주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 강원도와 춘천시에 전원이 감되고 있다. 총사업비 93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특히,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에는 춘천시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 충남 아산시, 전남 순천시와 담양군 등이 앞다퉈 나서며 우선순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22대 총선 국면과 맞물려 최종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주 중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혁신파크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달엔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민생토론회를 열고 당진시와 거제시를 기업혁신파크 사업지역으로 전격 발표했다. 강원도는 기업혁신파크 유치전 마지막 '티켓' 확보에 사활을 걸며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기업의 입주 공간과 주택, 교육·의료시

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고 (3년 50%·2년 25%)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받는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5배 완화된다. 기업혁신파크 입주 기업은 법인세 (3년 100% 2년 50%)와 국·공유지 임대료 (20%)를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뛰어들었다. 오는 2033년까지 9364억원을 투입,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부지 368만㎡를 데이터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IT와 바이오, 인공지능, 데이터를 결합한 지식첨단산업시설을 짓고 인근에 연구시설과 상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지정 시,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계획에 이미 기업 350여 곳이 참여의향을 밝혔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완료되는 2033년에 생산유발효과는 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4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원주시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있는만큼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춘천지역사회의 지역균형발전, 상대적 박탈감 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혁신파크는 강원도 첨단산업과의 연계성도 높다. 도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중심으로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보건의료데이터글로벌혁신특구를 따냈다.

김진태 지사는 4일 "춘천시는 7배가 넘는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좋다. 최종 선정되면, 우리 춘천시민의 한(恨)이었던 기업도시의 꿈을 이루게 된다"며 "이르면 내주중 (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춘천시장과 만나 의논하고 현장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09면

춘천 근화동 일대 개발사업 속도낸다

역세권 개발 예타대상 선정
캠페이지 혁신지구 도전
하수처리장 이전 여부 관건

속보=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본지 2월 29일자 9면)된 가운데 캠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도 6월 신청을 목표로 준비, 근화동 일원의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내고 있다. 이들 사업은 육동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의 핵심으로 사업의 속도와 방향이 결국 민선 8기 시정의 성과를 판단하는 가능자가 될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도시

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 오는 6월 국토부에 본 지정 신청서 접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로서는 4월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이지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도시·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 부지는 52만㎡다.

춘천시는 캠페이지 일원에 영상과 게임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집적단지 조성을 구상 중이다. 영화촬영부터 후반 CG작업까지 춘천에서 이뤄질 수 있게 준비, 관련 인력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대, 한림성심대와 학생들의 진로 분야 다양화를 검토 중인 강원대니고와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영상관련 기업과 MOU 체결, 간담회 등을 추진 중이다.

캠페이지 맞은편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개발 계획도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춘천역사를 포함한 51만㎡ 부지에 주거·상업·업무시설과 복합문화시설,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의암호 전망 출렁다리,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과 연계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하수처리장 이전이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역세권 개발 계획, 캠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각

각 단일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근화동 전체를 아울러 맞물려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난달 심의에서 GTX에 밀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상반기 이내에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해야 각각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3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서로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의 경우 민간투자심의를 통과, 우선협상대상자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일만 남았는데 눈 앞에서 지연되니 다음 심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4면

정선군 초·중·고 '꿈키움·창의' 아카데미 운영

정규수업반 전 단계 교육 마련
기초학력 신장·진로설계 지원
내일부터 나흘간 선착순 모집

정선군은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Pre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정선인재육성아카데미를 위탁운

영하고 있는 정선군청소년수련관(관장 신민규)은 초·중·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Pre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카데미 정규수업반에 들어가기 전 단계 교육으로 정선군의 인재육성 선순환 플랫폼을 마련코자 기획됐는데, '꿈키움아카데미', '창의인재아카데미' 과정으로 운영된다.

'꿈키움아카데미'는 초·중·고 5~6학년

생을 대상으로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창의융합 수업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과 꿈과 비전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아카데미'는 중·고 1~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창의융합 중등과정 교육을 통해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료 후에는 아카데미 정규수업반으로 입학한다.

'Pre 아카데미'는 연간 상·하반기 2회, 각 12주간 운영된다. 참가자는

6~9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신민규 정선군청소년수련관장은 "Pre 아카데미는 기초학력 향상과 올바른 학습습관 배양을 위해 교육·지도하고자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청소년들이 지역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기초를 다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주현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0면

江原日報

춘천시 교육발전특구 전담조직 만든다

7월 정기인사서 조직 개편
초·중·고·대 교육업무 통합
부시장 직속 4개팀 구상 중
내달 시의회에 개편안 보고

【춘천】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맞춰 대규모 조직 정비에 나선다.

춘천시는 올 7월 정기 인사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 초·중·고 교육 지원 업무를 맡던 교육도시과와 대학 협력 업무를

담당하던 산학협력과를 통합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전담할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전담과는 기존의 민원, 감사, 재난안전 기능과 마찬가지로 부시장 직속 담당관으로 편제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원화된 교육업무 통합과 동시에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해당과는 4개 팀 내외로 구성, 교육발전특구 정책 업무와 교육사업 지원, 대학 및 산학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다음 달 초 시의회에 교육발전특구 전담 조직 신설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사전 보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조래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민장학재단도 가칭 춘천인재육성재단

으로 확대 개편이 추진된다. 시는 현재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1국 1팀 체계를 갖춘 장학재단을 1국 3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와 교육청, 대학, 유관기관을 잇는 교육사업 전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완료됐다. 교육발전특구 춘천 지역협의체는 육동한 시장과 신경호 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와 도교육청, 6개 대학, 강

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시 문화재단, 더존비즈온 등 12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또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도시위원회도 정책 자문 역할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생애 전 주기 교육을 실현하는 춘천 교육발전특구 방향성에 맞게 실무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2면

강원도민일보

태백시 '외국인 유학생 모셔라' 유치 본격화

시, 필리핀 교류도시 대학 협약
지원책 제시 유학생 유입 만전
폴리텍대 등 대학 유치 기반 마련

지난 2월말로 폐교된 강원관광대의 대체사업 추진 등 활성화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 태백 유일의 대학인 강원관광대의 자진 폐교 신청을 인가, 지난달 말 폐교가 확정됐다. 폐교에 따른 특별편입(충북 음성

강동대 323명, 강릉영동대 4명)으로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상권 침체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활성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사회는 "대학 및 분교 유치 등을 통해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등 대학 유치를 위한 광복행보에 나섰다.

대학 유치를 위한 출발점으로 해외 교류도시 외국인 학생들을 집중 공략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및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의 도약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교류도시인 바기오시와 바왕시를 잇따라 방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류도시 소재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술교육 기회 제공 및 취업, 정주 여건 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해 대학 유치를 위한 체계를 다진다. 이는 계획이다.

앞서 신옥하 부시장도 필리핀 바기오시와 바왕시를 방문, 유학생들

이 태백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며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해 긍정적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상호 시장은 "교류도시 바기오시와 바왕시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거주인구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인·유·망·학·과 등을 개설해 대체산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0면

원주 아파트 미분양 4개월 연속 감소

지난 1월 기준 물량 1218세대
작년 9월부터 월 200세대 줄어
부동산 거래 시장 회복 기대감

2000세대를 훌쩍 넘기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던 원주 신규 아파트 미
분양 물량이 지속 줄며 1년여 만에
1000세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 통계누
리를 분석한 결과, 원주지역 신규 아
파트 미분양 물량은 2024년 1월 기준
1218세대로 13개월만에 1000세대
에 근접해지고 있다.

이는 강릉 1345세대를 밀도는 수
준이다. 경북 포항시(3579세대), 대
구 남구(2253세대) 등 전국 미분양
물량 1000세대 이상 지역 19곳 중 17

위로, 지난해 10월 1000세대 이상 16
곳 중 6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상
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주 미분양 물량은 2023년 9월
2175세대로 최근 2년간 최고점을 찍
은 후 같은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2175세대에서 10월 1894세대, 11월
1693세대, 12월 1410세대, 2024년

1월 1218세대 등 4개월 동안 매달
200여 세대씩 줄어드는 등 더디지만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도 1
년간 침체에서 최근 '보통'으로 전환
되는 기류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미분
양 높을 벗어나는 등 지역 부동산 거
래 시장의 회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태욱 tae92@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3면

공동 보육시설 갖춘 임대주택 구축

인제 용대리 일원 90억 투입 2026년까지 30호 조성
청년 자녀양육 가정 대상·지역 소멸 우려 해소 기대

【인제】인제 북면 용대리 일원
에 청년 자녀 양육 가정의 주
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단
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가 조
성된다.

인제군은 최근 농림축산식
품부가 주관한 2024년 청년 농
촌보급자리 조성 사업에 전국
8개 자치단체와 함께 포함되

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인제와 정선이 선
정됐다.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
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5억원
을 포함한 90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30호의 단독주택
형 임대주택이 조성된다. 공동
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
티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단지 입주 신청 조건은 40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이다. 특히
단지 도보권에 용대초교가 있
어 교육 활동이 보장되며, 이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해당 사업지구 일대

는 춘천~속초고속화철도 백담
역 신설, 용대지방정원 조성 등
이 예정돼 있어 입지적 여건이
뛰어나며, 가을꽃축제와 고속
철도 개통 등에 따른 신규 일자
리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된다.

최상기 군수는 “지방소멸 위
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의 청년
층과 은퇴자를 유입시키는 귀
농·귀촌 정착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경제 07면

올해 강원도 전기차 보조금 '978만원'

강원지역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 지난해 1,040만원에서 올해 978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지원이 축소된 영향으로, 지원금 감소에 따른 친환경차 정책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는 6,585대로 지난해(7,247대)보다 9.1% 감소했다. 차종별로 승용차 3,477대, 화물차 2,283대, 승합차 95대, 이륜차 73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차는 693대를 목표로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했던 지난해(1,116대)와 비교해

작년보다 62만원가량 줄어
車 증가율 95%→30% 급감
소비자 관심 하락 등 우려

423대 줄어든 수다.

전기·수소차 모두 보급 대수가 줄어든 가운데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 또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도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978만원으로, 전년(1,040만원) 대비 62만원 낮아졌다.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450만원으로 확정됐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기차 보조금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 전기차 보조금은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남(거장군 기준 최대 1,790만원)과 비교해 812만원 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 또한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낮아져 더욱 까다로워졌다.

문제는 보조금 사업 규모가 축소될수록 소비자 유인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2020년

66.8%, 2021년 94.9%, 2022년 76.3%를 기록했던 도내 전기차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0.1%로 떨어졌다.

지난해 강원지역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신청 접수 6개월째인 7월 까지도 30%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 관계자는 “전기차 신규구매 수요는 최근 4~5년간 보조금 사업으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며 “보조금이 줄어든 데다 현재까지는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신제품도 없는 상황이라, 보조금이 전처럼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2면

술올미술관 개관 한달도 안돼 부실시공 논란

바닥 갈라지고 난간·외벽 곳곳 페인트 벗겨져 눈살
업체 “마무리·보수 최선”... 강릉시 “확인 후 허가”

【강릉】개관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강릉 술올미술관이 부실 시공 논란이 휩싸였다. 새 건물의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면서 졸속 개관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4일 찾은 강릉 술올미술관 입구 난간과 주차장부터 벗겨진 페인트들이 눈에 띄었다. 최근 내린 폭설 이후 페인트들이

벗겨지며 회색 콘크리트가 노출됐고,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관람객 안전과 직결되는 난간 유리 일부는 주저앉아 케이 블타이로 묶어 놓는 등 임시 보수를 하기도 했다.

건물 외부에서는 조경 공사가 지속돼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며, 건물 내부 자재 마감도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4일 방문한 강릉 술올미술관 외부 난간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강릉=류호준기자

1층과 2층 바닥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가뭇물 메마른 눈과 같았다.

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했다. 주민 김모(45·강릉 흥제동)씨는 “세련된 외관을 내세웠던 미술관 외벽 페인트가 벌써부터 벗겨지고 마감 상태가 엉망이었다”며 “개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리 업체와 시공사 측은 수일 내 내·외부 마무리 공사 및 보수 공사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바닥 갈라짐에 대해서는 시멘트 시공 방식에 의한 현상으로 안전상 문제는 없

다고 설명했다.

강릉시도 현재 임시 사용 중인 술올미술관의 정식 사용 승인 전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지난달 13일 시로부터 최대 1년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중으로 정식 사용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술올미술관은 현재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상태로, 임시 사용 기간 건물 보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정식 사용 승인 허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준기자 gwhojun@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지역 11면

원주서 夜놀자 야간관광 확충

시 체류형 콘텐츠 발굴
'별빛 내리는 요가' 예정
'나오라쇼'도 대폭 개선

【원주】원주시가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강원관광재단과 손잡고 '별빛이 내리는 요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상지로 강원감영이 선정됐다. 강원감영에서 요가를 한 후 주변 10분 거리 이내 숙박시설에 1박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또 지역 대표 관광지인 간현관광지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나오라쇼'를 대폭

개선한다. 나오라쇼의 배경음악을 바꾸고 분수쇼도 보다 역동적으로 바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간현관광지의 대표 콘텐츠인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10인승 캐빈 22대로 운영되는 산악용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서는 등 2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케이블카 탑승장이 조성되는 통합건축물에는 첨단그린스마트센터, 내수면 생태전시관 등 풍성한 볼거리로 채워진다.

시는 또 강원관광재단과 협업을 통해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에 포함된 치악산을 중심으로 트레킹 관광 활성화도 도모한다. 앞서 원강수 시장과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가 간담회를 통해 시 축제와 연계한 협업사업 발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사설/칼럼 19면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광업소 폐쇄 고용감소 예상... 충격 완화 기대

6월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둔 태백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도시 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백 유일의 대학인 강원 관광대마저 폐교될 예정이어서 주민의 상실감이 큼니다. 내년 폐광하는 삼척 도계광업소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폐광으로 인해 지역 경제력이 급속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2개 도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해 주목을 끄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자구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삼척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시 생활안정자금과 전직·창업비용, 고용 촉진 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300여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는 각각 올해 6월과 내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광업소 폐광은 실업자 2561명과 함께 5년간 8조 9000여억원의 지역 경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

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일자리 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자치단체가 신청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지정 필요성 검토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최초 2년 동안 지정하며, 1년 범위 내 3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 동안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지역엔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폐광지역이 경제적으로 희생하기 위해서는 광업소에 버금가는 대체 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신에너지사업과 관광, 기업 유치 등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 동력을 만들어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신산업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현재로서는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폐광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중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유용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요구됩니다. 폐광지역 공동화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 부담이 되는 만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5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원 공공의료 위기 외면 안돼

-강원대 의대 140명 미흡, 의사는 진료 우선하길

의사업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부딪치면서 의료 공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은 만성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는데다가 최근엔 급격하게 수도권으로의 사들이 이탈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중입니다. 국립대인 강원대 의대는 전국에서 가장 의대 정원이 적고,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림대 의대 등 사립대는 지역인재 선발에 소극적이어서 의사 인력난을 부채질해왔습니다. 이런 열악하고 미흡한 의료환경 실상에 대한 고민을 의사 및 의대 학생에게서 찾기 어려워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림대 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동맹휴학에 나서 주목받았습니다. 강원대 의대생은 90%대가 휴학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내 9개 병원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진료 현장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경우는 강릉아산병원 단 한곳으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대의 복귀율입니다.

사법기관의 압수수색과 행정처분 등 정부 조치가 강경일변도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역대 정부에서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대생 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진료 파업으로 제동을 걸어온 의사 단체에 대한

시민 반응 역시 냉랭합니다.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휴진상태입니다. 의사수가 적다 보니 채용하려면 봉급을 올려야 하고, 격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김택우 강원도 의사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고뇌가 담긴 외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도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정에 나선 가운데 강원대는 9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학내 의대생 등반대를 무릅쓰긴 했으나 경북대 의대는 현 110명에서 250~300명 증원을, 충남대 의대도 110명에서 300명 배정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 의 통합으로 인해 전국 최대 학생수로 출범하는데, 전국 최하위 현 49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도 또다시 최하위가 될 것은 불보듯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것처럼 의대 교수 및 교육시설, 수련병원 확충에 차질이 없는 것을 전제로 붕괴 속도가 빠른 강원 의료환경을 정상화하고, 강원대 병원 삼척분원 설치 및 의료 유관산업 육성을 위해 타 시도 거점 국립대와 비슷한 300명에 근접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사설/칼럼 19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올 상반기 예타 통과돼야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상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가장 시급한 도내 SOC 사업이자 동서 6축인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이다. 도내 남부지역은 지리적 환경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그야말로 교통 오지다. 서해안, 남해안으로 접근하는 도로의 부족으로 지역 발전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해안선의 해변 침식과 어족 자원의 고갈, 삼척·태백·정선의 폐광지역 고령화·공동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강원 남부권 5개 시·군을 관통하는 지름길을 만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를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이유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1997년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첫 삽을 뜬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평택에서 제천까지만 개설돼 있다. 이에 조기 개통 염원을 담아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등 강원 남부지역, 충북, 경기 북부지역의 동서고속도로 경유지와 인접한 시·군 주민 71만9,368명이 동참했다.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신설이 지역

을 넘어 국민적 현안이라는 방증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여섯 번째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있다. 국토를 횡단하는 기존 5개의 고속도로가 통행 편의와 지역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개설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6번째 고속도로가 더는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번에 예타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성장 동력의 상실마저 가져올 수 있다. 강원권의 도로 개설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도로가 뚫리면 효율성이 커져 경제성이 높아진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동서 6축인 동서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과의 접근성도 향상시켜 균형발전과 국토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해 침체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영월~삼척 구간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2034년 평택~삼척 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5일 (화)

사설/칼럼 19면

꼬이는 ‘의·정 갈등’, 이제는 국민이 끌기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정부의 행정·사법 절차 착수에 반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대화의 자리도,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절규도 외면했다. 국민의 건강·생존권을 담당하는 의사들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이날 주최 측은 강원지역 350여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만여명이 집결했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강경 대응에 나

섰다. 즉,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전 공의들은 미미했다. 정부는 4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이 진행된다. 의사협회와 정부의 강경 태세에 퇴로를 찾지 못해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의사들의 주장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 때 가장 힘을 얻는다. 의사들은 민심을 올바르게 읽고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 뜻만 고집하는 입장을 버려야 한다. 의사단체는 총과업으로 국민을 겁박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사들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묶여 의사 수가 거꾸로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년 3,507명이었으나 23년 동안 오히려 3,058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선진국들이 의대 정원을 수천명씩 늘려 나가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상당수 대학이 지역 의료 상황을 고려해 대폭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국민이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된 의사 부족 현실은 통계를 아무리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절대 양보 못 해

정부, 면허정지·수사 등 ‘무관용’ 원칙

의사들, 민심 바로 읽고 현장으로 돌아와야

이제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맞은 일본이 좋은 사례다. 일본은 2007년 ‘지역의사제’를 도입,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는다. 선발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되 10년간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하게 한다. 그 결과 2018년 농촌 지역 의사 수가 8년 전보다 12% 증가했다고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당번 병원을 정해 해결했다. 병원 5곳에서 거절당한 응급환자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응급 병상을 찾아 전화를 돌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리의 상황과는 다른 풍경이다. 지역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